



1. 인권의 기원과 현재적 의미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무시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인권 개념은 서구 근대초엽에 생겨난 자연권(natural rights) 개념에 그 사상적 연원을 두고 있다. 인권은 계몽주의와 시민혁명을 거치는 근대의 과정에서 그 뿌리가 형성되었으므로 이념적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 새롭게 부상한 부르주아 계급은 국가권력과 교회권력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정신(종교)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염원은 사상의 자유, 생명권, 신체권,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자유주의 사상에 초석을 제공한 로크(J. Locke)는 생명권·자유권·재산권 등의 세 권리를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기본적 권리로 보았으며, 이러한 자연권의 개념은 미국의 ‘권리장전’(U.S. Bill of Rights, 1791)과 프랑스 혁명시기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을 거치며 오늘날의 인권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오늘의 인권 개념은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의 권리들을 포함하는 세 가지 ‘권리

* 이 원고는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가 공동주최한 “세계 인권선언 60주년 기념 심포지움 - 종교와 인권-”(2008년 11월 14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군'(rights-clusters)으로 집약된다. 첫째 정신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에 관한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소유권, 재산권 등), 신체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체포·구금·수색·압수에 대한 적법한 절차의 보장, 고문의 금지 등) 등을 포함하는 개인권적 기본권, 둘째 생명권, 노동권, 교육권 등을 포함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셋째 참정권, 청원권, 재판받을 권리 등을 포함하는 시민권적 기본권이 그것이다.

오늘의 이러한 인권 개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8년 유엔에서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선포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확산되게 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할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세계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를 핵으로 하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인권의 주된 항목으로 제시한 반면, 소련을 축으로 하는 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노동권이나 생존권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이는 정치이념이나 경제체제의 차이에 따라 중시되는 권리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유엔 상임이사국 간의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1948년 12월 최종적으로 완성된 인권선언문에는 사회주의권의 주장이 일정 부분 수용되어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노동권, 생존권, 노동조건과 여가에 관한 권리, 사회적 약자의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권리가 인권의 주요 항목으로 삽입되게 되었다. 그리고 1966년에는 유엔에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이 채택됨으로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단지 도덕적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2. 근대이전의 동양사회에 '인권'은 존재했는가

근대 이전의 동양사회에 '인권'은 존재했는가? 이러한 질문은 매우 곤혹스러운 비교철학적 물음을 야기한다. 동양에서 '인권'(人權)이라는 한자어는 서구 근대 정치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일본 메이지(明治) 시기에 자유민권운동의 전개과정에서 '천부인권론'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제기되었다. 따라서 "근대이전의 동양에 '인권'이 있었는가?"라고 묻는 일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더욱이 지성사적으로 볼 때 '인권'은 서구 시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국가권력이나 교회권력에 대항하여 쟁취한 '시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자생적으로 시민혁명을 경험해보지 못한 근대 이전 동양사회의 경우 인권이 존재했다고 말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 동양사회에 오늘의 인권 개념에 해당하는 도덕적 규범

마져 없었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전통 동양사회에 ‘청구권’(claim-rights)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해서 남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되받을 권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듯이, 오늘날의 ‘인권’에 해당하는 명시적인 개념이 없었다고 해서 근대 이전의 동양사회에서는 인간을 개나 돼지처럼 잔혹하게 다루어도 좋다고 여겼던 것은 아니다. 『논어』나 『맹자』와 같은 유교 경전을 보면 인권선언문에 나열된 ‘생존권’이나 ‘사회적 권리’에 해당하는 도덕규범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자는 죽은 제후를 장사지내기 위하여 산 사람을 같이 묻어 죽이는 순장(殉葬) 풍습을 강렬하게 비난한 적이 있다. 순장 풍습에 대한 공자의 이러한 비판은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자면 ‘생명권’(right to life)에 대한 존중을 의미한다. 비록 생명권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지라도 공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주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교정치 사상에서 ‘생존권’의 강조

고대 동양사회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가혹한 정치제도나 경제제도뿐 아니라 낙후한 생산력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고루 관찰된다. 전제권력에 의한 폭압과 학정(虐政), 제후국 간의 전쟁과 도살, 자연 재해와 기근, 낙후한 생산력과 가혹한 조세제도 등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전제권력의 폭압과 가혹한 형벌로부터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 공자는 군주들에게 ‘백성을 위한(爲民) 정치’를 펴도록 권고했고, 맹자는 군주들에게 ‘인자한 정치’ 즉 ‘인정’(仁政)을 시행하도록 강조했다. 아무리 기후가 좋아서 풍년이 들어도 세금을 바치고 나면 일 년에 수십 일은 굶는 것이 예사로 여겨지던 고대사회에서 백성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생명권’이라고 할 수 있다. 춘추전국 시대의 공자·맹자로부터 시작하여 청말의 담사동(譚嗣同)이나 강유위(康有爲)에 이르기까지 동양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루는 ‘인자한 정치’(仁政)란 생존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여건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정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 이상은 오늘날의 개념으로 표현한다면 생명권과 노동권 그리고 사회보장권 등이 고루 보장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비록 근대 이전의 동양사회에서 생명권이나 노동권 또는 사회권이라는 명시적인 단어들은 사용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유가의 ‘인정’(仁政) 이념에서 이러한 권리들이 함축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유가사상가들이 백성들을 대변하여 주장하는 도덕규범은 오늘날 입헌민주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자가 위정자에게 “백성을 때(時)에 맞게 부려야 한다.”(『논어』 「학이」)라고 말하는 일은 ‘부당한 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에 해당한다. 또한 형벌이나 가혹한 처벌대신에 ‘덕’에 의해 다스리라고 군주들에게 당부하는 일은 ‘생명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더불어 ‘부당하게 체포나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해당한다. 또한 “출신에 관계없이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논어』 「위령공」)라는 공자의 주장은 사회적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민중이 굶주리지 않도록 향산(恒産)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맹자』 「양혜왕」)는 맹자의 주장은 경제적 기본권인 ‘노동할 권리’와 ‘최저 임금을 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맹자는 공자보다 더욱 급진적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독재자에 대항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저항권’까지도 인정하고자 했다. 비록 유교사상에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사회만큼의 다양한 ‘자유’나 ‘권리’의 항목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유교사상가들이 몸담았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에 고통받고 억압받는 민중들을 위해 언급할 수 있는 권리는 거의 다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층민들의 생존권과 사회적 권리에 관한 공자·맹자의 강조는 한대(漢代)에 이루어진 『예기禮記』 「예운禮運」 편에서 다음과 같이 되풀이해서 강조된다.

대도(大道)가 행해지던 시대에는 천하를 개인의 사유물로 여기지 않고 공공(公共)의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된 자는 임금의 지위를 자기 자식에게 넘기지 않고 어질고 유능한 자를 가려서 전해주었다. 그들의 말에는 신의가 있었고 사회의 화목을 위해 몸을 닦았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의 어버이만을 친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버이에게까지 미치며, 오직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자식에게까지 미쳤다. 노인으로 하여금 안락하게 수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장년의 사람들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주었으며, 어린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고,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장애인·병자들에게도 생존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를 마련해주었다.¹⁾

『예기』에서 말하는 노인으로 하여금 안락하게 수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일은 현대적 용어로 말하자면 자립 능력이 결여된 노인에게 의료·의식주·주거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 제도를 제공하는 일을 뜻한다.(25조) 그리고 장년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주는 일은 노동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뜻한다.(23조) 또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은 인권선언 제25조에 명시된 보살핌을 받을 권리 그리고 제26조

1) 『禮記』 「禮運」 편.

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 등에 해당한다. 그리고 홀아비·과부·고아·독거노인·장애·인·병자들의 생존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은 인권선언 제25조 1항에 명시된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라는 조항의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예기』에서는 이러한 제반 사회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 상태를 ‘대도’(大道)가 행해지는 상태라고 말하고, 이러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를 ‘대동’(大同) 사회라고 부른다. 대동사회는 생존과 관련된 개인의 기본권과 사회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이며, 이러한 청사진에는 천하를 소수의 지배층의 사유물로 보지 않고 공공(公共)의 것으로 간주하는 ‘공적 이성’(public rationality)의 정신이 바탕에 깔려있다.

유교 경전에서 경제적 권리나 사회적 권리에 해당하는 언급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정치적 권리’나 ‘시민적 권리’에 관한 언급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대다수 백성이 ‘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이거나 주체적이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자율적인 시민의식도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인구의 90% 이상이 헐벗고 굶주리며 문자마저 해독하지 못하는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거나와 나아가서는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일 수도 있다. 유교의 정치사상에서 백성은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간주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서경』에서는 좋은 정치란 “마치 엄마가 어린 아기 돌보듯 하는 정치”(如保赤子)라고 적고 있으며, 『춘추좌전』에서는 좋은 정치란 “백성을 다친 사람 보듯 하는 정치”(視民如傷)라고 적고 있다. 많은 비판가들은 유교의 이러한 정치이념이 백성을 ‘아기’ 또는 ‘병자’와 같이 자율성이 결여된 나약한 존재로 간주하는 ‘반민주적’ 정치사상이라고 비난하곤 한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엄마가 아기를 보살피는 것처럼 군주가 백성을 보살피야 한다는 생각을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하는 일은 과연 해석학적으로 좋은 태도일까? 17세기 영국의 정치철학자 홉스(Hobbes) 역시 군주를 목자(牧者)에 비유하고 시민을 양에 비유했다. 근대의 문턱에 접어든 17세기 영국에서도 시민이 양에 비유되는데, 홉스보다 무려 1천2백여 년 전에 살았던 공자·맹자가 백성을 양에 비유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무엇인가? 인구의 대다수가 문맹이고 교육받지 못한 상황에서 열악한 경제 조건 아래 허덕이는 상황이라면 덕스러운 군주가 나서서 “엄마가 아기 보살피듯” 보살

퍼주는 일이 그렇게도 반민주적이고 흉포한 일일까?

『성경』이나 찬송가의 구절에서도 예수를 어린 양을 보살피주는 ‘착한 목자’라고 칭송하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반민주적이라거나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지는 않는다. 예수라는 절대적 존재 앞에서 나약한 인간이 양으로 취급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마가 아기에게 “아이고 예뻐라! 우리 강아지!”라고 하며 엉덩이를 토닥여주는 일을 반민주적이거나 반인권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자율적 생존능력이 없는 가냘픈 생명은 보호의 대상이지 엄마와 대등한 권리를 놓고 다투는 ‘평등한 주체’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자가 군주들에게 백성을 사랑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인’(仁)은 “인민을 사랑하는 일”(愛人)이다. 공자는 글도 읽을 줄 모르고 기아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무자비한 형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가혹한 세금과 무거운 형벌로 다스리려고 하면 백성들은 빠져나가려고 할 뿐 수치심을 잃게 되고 만다. 그러나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가지런히 한다면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바르게 될 것이다.(『논어』「위정」편).

공자와 마찬가지로 맹자 역시 백성들에게 항심(恒心)을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항산(恒産)부터 보장해줄 것을 주장한다.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기대할 수 있는 계층은 사(士) 이상의 계급이라야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은 수치심을 가지기 어렵다. 수 십 일씩 굶주리다가 먹을 것을 보면 체면 불구하고 달려드는 것이 생명을 가진 존재의 보편적인 모습이다. 다만 평소에 남다른 지위와 교양을 누렸던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체면을 차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사람은 바로 맹자가 말하는 ‘사’(士)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문자와 교양을 습득하지 못한 일반 백성은 그렇지 못하다. 당장 목숨을 부지하는 일이 급하지 체면이나 수치심은 교양인의 사치스런 허영이기 때문이다.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백성들의 생존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백성들을 문화인으로 만들려면 그들의 생존권부터 보장해주라는 것이 공자·맹자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것 같다. 유교의 이런 정치사상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문화대혁명 시기이래 중국학자들은 공자와 맹자의 정치사상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해왔다. 하지만 공자·맹자의 정치사상은 군주와 인민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정하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공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서’(恕)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는 문자적으로 ‘같음’의 의미하는 ‘여’(如)자와 ‘마음’을 의미하는 ‘심’(心)자가 합쳐서 이루어져 있다. 남을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같은 마음으로” 배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자

는 ‘서’의 적극적 표현으로 “내가 서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서게 해주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면 먼저 남부터 도달하게 해주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의 소극적인 표현으로 “내가 남으로부터 당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이라면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서’의 덕목은 ‘호혜성의 원리’(reciprocity)에 해당하는 윤리규범인 동시에, 보편적 윤리원칙이 성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보편화의 원칙’(principle of universalizability)에 해당한다.

공자는 군주의 이익만 대변하고자 한 보수·우파도 아니며, 민중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한 급진좌파도 아니었다. 공자는 군주와 백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조화의 정치’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자는 군주들에게 수신(修身)을 통하여 덕성을 연마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민중을 위해서는 생존권의 보장을 주장한 것이다. 공자가 군주들에게 권고하는 ‘자기성찰’과 ‘자기절제’ 그리고 ‘덕성의 연마’는 오늘날의 언어로 ‘적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대단히 열악하고 저급한 문명의 단계에서 그나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층은 우선 문자를 해독할 수 있고 지식과 교양을 습득한 소수 엘리트 계층이었다. 공자가 끊임없이 정치를 담당하는 엘리트 계층을 향하여 “자신을 닦아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라!”(修己安人)(『논어』「현문」)고 권고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유학에서는 정치를 담당하는 지배계층은 ‘권리의 향유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의무의 담지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소수의 지배계층만이 정치참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수 특권층의 ‘자유’와 ‘권리’가 도덕적으로 절제되어 대다수 백성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치는 바로잡는 일이다!”(政者, 正也)라는 공자의 말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획득한다. 공자가 끊임없이 지배계층을 향하여 덕(德)을 쌓도록 권고하고 욕망을 절제하도록 요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다. 만약 공자가 험벗고 굶주리는 기층민을 향하여 욕망을 절제하라고 권고했다면 이는 그야말로 보수·반동적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다수 인민들은 절제해야 할 만큼 넘쳐나는 욕망도 없었거니와 그러한 욕망을 기대조차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욕망의 절제는 언제나 욕망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요청된다. 험벗고 굶주리는 대다수 인민들에게는 ‘욕망의 절제’가 아니라 ‘최소 욕망의 충족’ 즉 ‘생존권의 보장’이 요청되는 것이다.

‘인간의 권리’와 관련하여 유교 사상가들이 자기 시대에 노력했던 일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1)소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던 특권적 권리(privilege-rights)를 도덕적으로 정화시켜 덕스러운 방식으로 행사하도록 요구한 일이다. 이미 지배자의 위치에 올라서서 충분히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계층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항목의 권리가 아니라 ‘자기절제’와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자연히 (2)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일로 연결된다. 마치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게 되듯, 사회의 한 (지배)계층이 한정된 재화와 권리를 독점해버리면 다른 계층(피 지배계층)은 그만큼의 결핍과 억압을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자가 자기 시대 인민들을 위해 설파했던 ‘생존권’은 근대에 들어 서양에서 먼저 쟁취되었다. 자유주의는 인간을 종교적 구속과 정치적 압박 그리고 봉건도덕의 쇠사슬에서 해방시킨 공로가 있지만, 이보다 근본적으로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자기보존의 ‘의무’를 자연법적 ‘권리’로 정당화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자기보존’은 ‘자기소유권’(suum)이 보장됨으로써 가능해지며, ‘자기 소유권’으로부터 ‘생명에 관한 권리’ ‘신체에 관한 권리’ ‘자유에 관한 권리’가 파생되고, 이러한 제반 권리로부터 다시금 ‘재산 소유권’이 도출된다. 이렇게 생명·신체·자유·재산에 관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근대인은 비로소 ‘자기보존’의 권리를 규범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자가 그토록 자기 시대의 군주들을 향하여 설파했던 ‘생존의 권리’는 그가 죽은 지 2천여 년이 지난 후 근대 서양에서 먼저 쟁취된 것이다.

그러면 공자는 현대 사회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공자는 자기가 그토록 염원하던 ‘생존의 권리’가 규범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단 크게 기뻐해 할 것이다. ‘생명권’이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고대 사회의 순장과 같은 잔혹한 악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신체권’이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절대권력에 의한 가혹한 형벌과 고문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으며, ‘재산권’이 보장됨으로 말미암아 노동의 결과물을 자기의 소유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공자가 오늘날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부조리의 진상을 파악한다면 곧 실망을 감추지 못할 것이다. ‘소유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위협받는 민중의 생존권,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조장되는 민족갈등과 지역감정, 그리고 ‘자유 수호’라는 미명아래 자행되는 정치적 탄압과 테러 등은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희석시키는 왜곡된 현상들이다. 공자가 만약 이 시대에 살았다라면 그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온갖 억압과 불평등 그리고 탐욕과 방종을 교정하기 위해 또 다시 천하를 주유(周遊)하러 나설지도 모른다.

4. 계급에 따른 ‘덕’과 ‘권리’의 차등적 강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유교에서는 ‘가진 자’(지배계층)에게는 ‘자기성찰’과 ‘자기절제’에 의해 권리를 덕스러운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가지지 못한 자’(피지배계층)에게는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유교 사상가들의 ‘덕’과 ‘권리’에 대한 이러한 ‘차등적 강조’(differential emphasis)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오늘날의 지배계층에게는 ‘자기성찰’과 ‘자기절제’가 결여되어 있으며 약자를 향한 배려의 미덕은 찾아볼 수 없다. 근대 초기에 전제왕권과 교회권력에 대항해서 ‘인권’을 부르짖었던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오늘날에는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군림하게 되었다. 원래 사회적 약자였던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봉건 권력을 타파하고 새로운 지배자의 지위에 올라서게 된 것이다. 특히 양도 불가능한 소유권과 영리추구의 무제한적 자유는 새로운 지배계급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주는 이념적 방패막이가 되었다. 이들 지배계급의 ‘소유권’을 위하여 민중들의 ‘생존권’은 손쉽게 억압당하곤 한다. ‘권리’의 이름으로 또 다른 ‘권리’가 억압당하고, 강한 자의 자유를 위하여 약한 자의 자유가 박탈당하는 현실. 이 모든 부조리는 아름답게도 ‘자유’와 ‘권리’라는 이름으로 자행된다. 만약 공자나 맹자와 같은 사상가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은 또다시 강한 자에게는 ‘자기절제’와 ‘자기성찰’의 미덕을 권고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 권리들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찬란한 깃발을 내건 정치체제 안에서 살고 있지만, 고통에 찬 양심수의 목소리(사상의 자유)나 굶주림에 고통 받는 해고자·실업자의 신음소리(생존권)는 묵살되기 일쑤다. 우리 헌법에는 국제적 인권규약에 상응하는 기본권들이 대거 나열되어있지만, 정작 ‘언론의 자유’는 특정 당파의 지배권력에 의해 장악되고, ‘표현의 자유’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집시법 위반이라는 시시껍질한 하위 법령에 의해 억압받는다. 우리는 명목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작 ‘자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정작 ‘권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묵살되어버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현주소이다.

5. 인권 상황의 한계와 미래

유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권’은 사회적 강자보다는 오히려 약자들을 위해 고안된 규범적 장치이다. ‘권리’(rights)는 상대방에게 ‘의무’(duty)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규범적 강제력’(normative force)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한 구속력을 지닌다. 엄격한 의미에서 ‘권리’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전제 조건

으로 성립한다. 즉 한 개인이 권리를 가질 때 상대방은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상대방을 의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규범적 강제력 때문에 ‘권리’는 개인(특히 사회적 약자)의 이익이나 자유를 부당한 간섭이나 횡포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권리’ 개념이 지닌 규범적 강제력 때문에 파인버그(J. Feinberg)는 이 세계가 아무리 인자·자비·동정 등의 미덕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만약 ‘권리’가 없다면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황폐한 땅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고 역설한다.²⁾ ‘권리’ 개념이 지닌 규범적 강제력과 달리 ‘덕’은 행위주체의 자발적 의지와 자율적 성품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규범적 강제력의 측면에서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근대 윤리학의 통용화폐인 ‘권리’ 개념은 전통의 덕윤리가 지닌 ‘제도적 약점’을 한 단계 보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권리 개념이 전통의 덕윤리를 제도적 측면에서 한 단계 보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권리 개념은 덕윤리를 내용적 측면에서 한 단계 강등시켰다는 혐의도 피할 수 없다. ‘소극적 자유’(negative liberty)에 해당하는 권리(예를 들어 생명권이나 고문 받지 않을 권리)들은 한 국가의 정치적 성숙도 또는 민주주의의 신장과 더불어 비교적 용이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적극적 자유’(positive liberty)에 해당하는 권리(예를 들어 노동권이나 생존권)들은 한 나라의 정치적 성숙도와 상관없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권리’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상대방(국가 또는 기업)에게 강제력 있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현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권리 또는 시민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상대방(국가 또는 권력)에게 ‘불침해’ 또는 ‘불간섭’이라는 ‘소극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보장받을 수 있지만, 사회적 권리 또는 경제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분배’ 또는 ‘복지’라는 ‘적극적 의무’를 국가(또는 기업)에 부과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이름뿐인 권리’로 전락하고 있다. 애당초 인권선언에 삽입될 권리의 항목을 놓고 설전을 벌였던 자유주의권과 사회주의권의 대립은 아직도 그 불씨가 꺼지지 않은 채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인권선언문 제22조, 23조, 24조, 25조, 26조에 언급된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노동권, 생존권, 휴식할 권리, 사회보장권 등은 단지 명목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의 항목일 뿐, 이를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규범적 구속력에 대

2) Joel Feinberg, "The Nature and Value of Rights," in *Bioethics and Human Rights: A Reader for Health Professionals*, edited by Elsie L. Bandman and Bertram Mandman (New York and London: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6), 19-31쪽.

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약자에게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의 ‘소유권’(세계인권선언 제17조)을 어느 정도 제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권리와 권리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다. 이 점이 바로 권리중심의 윤리학이 지니는 치명적인 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자와 가진 자에게는 자기성찰과 자기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는 한편, 약한 자와 못가진 자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주장해온 유교의 덕윤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권리중심의 윤리를 보완할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제 인권의 보편성만을 추상적으로 강조해온 종래의 인권담론은 시급하게 실현이 요청되는 인권의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한 적실성 있고 내실있는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세계인권선언’(UDHR)에 대한 후속적·보완적 조치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명시하는 ‘세계책임선언’(UDSR: Universal Declaration of State Responsibility)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